

“예산 줬다” vs “떠넘겼다”...출구없는 대치

정부-교육청 끝없는 갈등...누리에산 쟁점은

예산편성 여력 “7개월치 가능”에 “억지 논리 퍼나” 반박
어린이집 책임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법률적 해석 논쟁

장휘국교육감 “책임전가 도 넘었다” 발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8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연이은 입장 발표와 관련,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고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들 행동이 매우 무책임하다”,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통탄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며 강하게 맞받아치는 모양새다.

이. 이는 누리과정의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정해져 있던 비율로, 정부는 누리과정을 2012년부터 도입하면서 필요한 예산 만큼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2012년 1조 68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3조 98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 교부금은 2013년 40조8000억원에서 2015년 39조4000억원대로 줄었다. 더구나 누리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2014년까지 분담토록 했지만 지난해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누리예산이 포함됐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

은 별도 예산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성할 여력 있다=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세우는 게’ 아니라 ‘못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 명의로 “광주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자체 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 인건비 과다 편성액 53억원,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 등 310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시의회에서 이미 85억원이 감액됐고, 지원초 시설비도 추경에 반영돼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0원’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17억원의 사실이지만 학감초교 이전공사비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충당하려면 181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지방세 추가 전입 전 망액 31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257억원 등 574억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광주시가 예산을 내려주지도 않았고 들어오더라도 연말에 확정된다”면서 “미리 당겨 쓰라”는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어린이집은 누구 책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상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 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로, 법률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영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누리과정 취지를 감안하면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을 심습니다” 광주 북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북구청 광장에서 관내 27개 주민센터로 보낼 쌀과 소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물품은 김영관 그린레스토랑 회장이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기탁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대립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형국이다. 어느쪽 주장이 근거가 있을까.

<정부, 누리과정 예산 줬는데...= ‘보육 대란’을 해결하려면 현재로서는 누가 돈을 부담하느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부금으로 다 내려줬는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대선 공약인데도 별도 재정지원 없이 떠넘겼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받은 돈을 다 받고 필요한 건 쓰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이 시·도 교육청에 전액지원됐다. 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출근 강조해온 “누리과정 예산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현행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올해 대략 41조원)를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난해 1124명 적발

광주·전남 액수도 매년 늘어

#. 광주 하남산단 내 A업체 소속 근로자 31명은 근로사실을 속이고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았다. 사업장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이 부정수

급한 금액은 무려 1억3600만원에 달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금액 전체를 환수조치하고 형사 고발했다. 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2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124명으로, 부정수급액은

5억71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925명, 4억4500만원)에 비해 각각 21.5%, 28.3%가 증가했다. 이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줄어드는 반면 실업급여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4만 9107명에서 지난해 4만 8690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급액은 2015년 1100만원에서 2306억3600만원으로 291억2500만원 가량 늘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도 늘어나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개 기관은 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딸로 입양한 동자승 성폭행 승려 항소심도 징역 6년

딸로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승려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성의 한 사찰 승려 백모(6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전

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피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백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인 A(18)양을 딸로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70대 여성 강간 미수 살해 60대 무기징역 선고

이웃집 7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하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0시 14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이웃인 70대 여

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지자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잔혹하며 반인륜적 범행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형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허위 기재’ 박병중 고홍군수 대법서 최종 무죄 판결

‘오바마 봉사상’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됐던 박병중 고홍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물에 ‘오바마 봉사상’ 수상 실적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47)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증흥건설 부사장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익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기혐의 수사 구의원 한달째 잠적...구의회 행방 수소문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광주의 한 기초 구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의사 일정보도 불참하는 등 한 달째 잠적해 구의회가 행방을 수소문. ○...28일 광주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A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이후 행방이 묘연한데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213회 임시회에도 불참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자택으로 회회출석을 요

구하는 공문을 발송.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의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끊겨 기소 중지 처분했다’는 공문을 전달받고 A의원의 소재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의원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 의정활동에 불참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후문/북구청 주차장 2분! (정문과후문사이)

4면 올 대리석 / 내부 깔끔

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

☆ 보 5,000만 월 460만 ☆ (용 1억2천)

매가 6억 6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올시설 / 월세 책임보장

(보1억5천/ 용6억)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010-6834-4800 010-6832-9700